

예산 · 재정 정책연구 동향

「2024-제6호(Vol. 35호)」

본 자료는 2024. 12. 13.까지의 국내외 주요 동향을 요약·수록한 자료로,
‘바로가기’를 누르면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하는 실천하는 신뢰받는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운영에결전문위원실]

분 야 별 목 차		
분 야	제 목	자료 출처
1. 경제분야 (p1)	• 2024년 12월 KDI 경제동향	한국개발연구원
	• 2024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
2. 재정분야 (p2~3)	•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2월호	기획재정부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연구	산업연구원
	•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국회예산정책처
3. 재정·예산 관련 법령 (p4)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법제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p5)	• 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 폐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한국은행 강원본부
	•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강원도 농지 자산의 경제적 편익은 2조 증가 예상	강원연구원
5. 뉴스브리핑 (p6~7)	• 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행정안전부
	• 디지털 기술로 살기좋은 지역사회 실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
	•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범운영 개시	중소벤처기업부

1. 경제

출처

■ 2024년 12월 KDI 경제동향

(내용 요약) [바로가기](#)

한국개발연구원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업을 중심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

-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였으며,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감.
- 그러나 상품소비와 건설투자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
 - 상품소비의 감소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개인사업자의 연체율 상승세도 지속
 - 건설 관련 선행지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건설기성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고용 여건도 건설업을 중심으로 완만하게 조정됨
-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악화는 수출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2024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내용 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24. 10월 산업활동동향 주요지표는 서비스업 생산 증가, 광공업 생산 보합, 소매판매와 설비 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
 - 생산은 광공업 생산은 보합(전월비 0.0%, 전년동월비 6.3%), 서비스업 생산에서 증가(전월비 0.3%, 전년동월비 1.9%)했으나, 건설업(전월비 Δ 4.0%, 전년동월비 Δ 9.7%)에서 감소하여 1차산업 생산(전월비 Δ 0.3%, 전년동월비 2.3%) 감소
 - 지출은 소매판매(전월비 Δ 0.4%, 전년동월비 Δ 0.8%) 및 건설투자(전월비 Δ 4.0%, 전년동월비 Δ 9.7%), 감소, 설비투자(전월비 Δ 5.8%, 전년동월비 5.8%)는 전월 큰 폭 반등 후 조정
 - 소비자심리 <'24.11월 CSI 100.7(전월비 Δ 1.0p)> 하락, 기업심리 실적 <전산업 BSI 11월 91.5(전월비 Δ 0.6p)> 및 전망 <전산업 BSI '24. 12월 89.7(전월대비 Δ 0.1p)>은 하락
- '24.11월 고용은 취업자 수 증가, 물가는 상승률은 안정 흐름 지속
 - '24.11월 취업자는 전년동월대비 12.3만 명 증가('24.10월 8.3만 명 \rightarrow 11월 12.3만 명), 실업률은 2.2%로 전년동월대비 Δ 0.1%p 하락
 - '24.11월 소비자물가는 전년동월대비 1.5% 상승('24. 10월 1.3% \rightarrow 11월 1.5%),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1.9%, 농산물·석유류 제외지수는 1.8%, 생활물가지수는 1.6% 상승
-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 증가 우려
 -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 증대
 -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대외신인도를 확고하게 유지하는 한편,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함께 민생안정 지원방안 마련 등 추진

2. 재정

출처

■ 월간 재정동향 2024년 12월호

(내용 요약) [바로가기](#)

기획재정부

- 총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2조 원 증가한 498.7조 원임
 - 국세수입은 293.6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1.7조 원 감소함*
 - * 법인세 △17.9조 원, 소득세 +0.2조 원, 부가세 +6.1조 원 등
 - 세외수입은 24.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5조 원 증가했으며,
 - 기금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16.4조 원 증가한 180.9조 원임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B)	10월 (C)	10월 (누계D)	진도율 예산 (E=A)	진도율 결산 (F=B)	본예산 (G)	10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10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J-E)	진도율 결산 (J-F)
□ 총수입	625.7	573.9	56.1	492.5	78.7	85.8	612.2	59.3	498.7	81.5	3.2	6.2	2.7	△4.3
◇ 국세수입	400.5	344.1	38.6	305.2	76.2	88.7	367.3	38.3	293.6	79.9	△0.3	△117	3.7	△8.8
◇ 세외수입	25.0	28.5	1.8	22.6	90.6	79.4	28.2	1.7	24.1	85.6	△0.1	1.5	△5.0	6.3
◇ 기금수입	200.3	201.1	15.8	164.5	82.2	81.8	216.7	19.3	180.9	83.5	3.6	16.4	1.3	1.7
◇ (사보기금*)	114.6	122.3	8.2	102.5	89.4	83.8	123.8	13.1	110.5	89.2	4.9	8.0	△0.1	5.4
◇ 세입세출 외	-	0.3	-	0.1	-	-	-	-	0.1	-	-	△0.0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26.3조 원 증가한 529.1조 원임

* 국민연금급여지급(+3.6조), 국고채이자상환(+2.9조), 건강보험가입자지원(+1.8조) 등

(단위: 조원, %, %p)

	'23년						'24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본예산 (A)	결산 (B)	10월 (C)	10월 (누계D)	진도율 예산 (E=A)	진도율 결산 (F=B)	본예산 (G)	10월 (H)	10월 (누계, I)	진도율 (J=I/G)	10월 (H-C)	누계 (I-D)	진도율 예산 (J-E)	진도율 결산 (J-F)
□ 총지출(B)	638.7	610.7	35.4	502.9	78.7	82.3	656.6	36.9	529.1	80.6	1.4	26.3	1.9	△1.8
◇ 예산	441.1	413.1	24.1	343.9	78.0	83.2	438.3	23.8	360.6	82.3	△0.2	16.6	4.3	△1.0
○ 일반회계	369.4	343.5	20.5	284.6	77.0	82.8	356.5	20.3	291.5	81.8	△0.2	6.9	4.7	△1.1
○ 특별회계	71.6	69.6	3.6	59.4	82.9	85.2	81.7	3.5	69.1	84.5	△0.1	9.7	1.7	△0.7
◇ 기금	197.7	196.5	11.3	158.2	80.0	80.5	218.4	13.0	168.3	77.1	1.7	10.1	△3.0	△3.4
◇ (사보기금*)	69.5	72.0	5.9	60.7	87.3	84.3	76.6	6.5	65.3	85.2	0.6	4.6	△2.1	0.9
◇ 세입세출 외	-	1.0	0.1	0.8	-	76.4	-	-	0.3	-	△0.1	△0.5	-	-

2. 재정

출처

■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의 지역 경제성장 효과 연구

(내용요약) [바로가기](#)

산업연구원

- 2004년 참여정부 당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약 20년간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수도권-비수도권 간의 경제적 격차는 감소하지 않고 있으며,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 역시 심화되고 있음.
- 정부의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가 증가하는 거시(macro)적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대한 정량적 평가 및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5년 단위로 수립·추진되는 지방시대 종합계획(舊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이하 '균특회계')를 통해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음.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재정자료상의 균특회계 보조금이 해당 지역의 경제성장 및 수도권-비수도권 간 격차 완화를 통한 지역균형발전 달성에 미치는 효과를 시도 단위 패널자료를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 하였음. 지역 단위 균특회계 보조금의 정책 효과 분석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균특회계 보조금을 통해 추진되는 사업의 '기회비용 대비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음.
- 특히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일수록 균특회계 보조금 규모가 크다는 점 등에서 기인하는 잠재적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신고전파 경제성장 이론의 실증분석 모형을 패널 구조적 벡터자기회귀(SVAR) 모형으로 응용한 모형을 활용함.

■ 인구감소지역 지원사업 평가

(내용요약) [바로가기](#)

국회예산정책처

- 우리나라는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여러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2020년을 기점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초과하면서 인구가 자연 감소로 전환되었고, 앞으로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으로의 청년층 이동에 따라 사회적인 인구 감소 또한 경험하고 있음. 청년들이 교육, 일자리 등을 이유로 수도권으로 이동하면서, 지역 사회의 노동력이 감소하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 지역 경제와 사회 구조가 약화되고 있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완화하고자 2021년부터 89곳의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연 1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정책·사업을 펼치고 있음.
- 본 보고서는 인구감소의 주요 원인을 고찰하고,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적정성과 정부 지원사업의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인구감소지역의 인구감소의 주된 원인은 '저출산 및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등 특히 농촌지역에서 이 문제가 심각함.

3. 재정 · 예산 관련 법령

출처

■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24.12.10. 시행 '25.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 법률 제명을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 협정의 범위를 자유무역협정에서 무역·통상에 관한 조약 등까지 확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320호, 2024. 2. 20. 공포, 2025. 1.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 내용에 맞추어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공기관 또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으로 정하는 한편,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매출액 등에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통상변화대응지원기업의 지정 요건 중 기업의 전체 매출액 또는 생산량 등의 감소율을 '100분의 10 이상'에서 '100분의 5 이상'으로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정 '24.12.10. 시행 '26. 1.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 지방자치단체의 저출생 대응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특별자치시·시·군 및 자치구에 배분하는 부동산교부세의 교부기준 중 '지역교육'을 '저출생 대응'으로 대체하고 그 비중을 종전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5로 확대하되, '사회복지'의 비중을 종전의 100분의 35에서 100분의 20으로 축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정 '24.11.13. 시행 '24.11.1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바로가기](#)

- 학령인구 감소세가 심화함에 따라 모든 학생을 인재로 양성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활용한 교원역량강화, 기초학력 보장 지원 등 공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저출생 극복 및 디지털교육혁신 등 교육의 대전환기 사회난제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이 일부개정(대통령령 제34981호, 2024.11.5., 2025.4.1. 공포·시행)됨에 따라 관련 산정공식 및 단위비용을 정하는 동시에, 기존의 국가시책특별교부금심의회를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교부·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위원회로 변경함으로써 교부금 운용의 전문성을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4. 정책 및 연구

출처

■ 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 폐업 현황 및 정책적 시사점

(내용요약) [바로가기](#)

- 최근 강원지역 자영업자 폐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업종의 폐업률은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음식점, 소매업체의 폐업률이 예년 수준을 큰 폭 상회할 것으로 예상
 - 폐업 증가로 폐업공제금 수령, 대위변제도 늘어나는 가운데 강원지역 자영업자의 부채의 질취약차주 대출 증가도 악화
- 재취업, 재창업 지원 등을 통해 폐업 자영업자의 연락처를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자영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실행
 - 특히, 강원지역의 경우 재창업 비중이 전국 대비 높은 수준으로 준비되지 않은 회전문 창업을 방지할 필요

한국은행
강원본부

■ 전통시장 내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내용요약) [바로가기](#)

- 전통시장 상인 중 60세 이상인 상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33.3%에서 2022년 57.6%로 증가하였고, 상인의 평균연령은 같은 기간 55.2세에서 60.2세로 증가함.
- 상인의 고령화에 따라 빈 점포를 활용한 청년 창업 지원은 전통시장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 지원사업 추진 시 민간의 투자나 용자를 받은 청년 우선 지원, 가업승계·점포승계 또는 업종 전환 지원, 맞춤형 업종 선정, 상인회를 비롯한 상인조직의 적극적인 역할, 창업 후 사후관리 강화 등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국회입법조사처

■ 농촌활력촉진지구로 강원도 농지 자산의 경제적 편익은 2조 증가 예상

(내용요약) [바로가기](#)

- 2024년 10월 강원도 농지특례 핵심 사항인 농촌활력촉진지구가 최초 지정되었음. 농지 규제의 유연화로 농촌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 사업기간 단축, 지역주민 수요를 최대한 반영하는 효율적인 지역개발이 가능해 짐.
-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도 농지 자산의 경제적 편익 증대에 상당한 기여를 함. 제도 시행으로 강원도 농지 자산가치는 약 5.2조 원 상승, 반면에 농지의 식량 생산 기회비용이 약 3조 원임에 따라 강원도 농지 자산의 경제적 순편익(현재가치)은 약 2조 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강원연구원

5. 뉴스브리핑

출처

■ 가평군·속초시 접경지역으로 지정

(내용요약) [바로가기](#)

행정안전부

- 기존 15개 접경지역에 가평군, 속초시를 추가하는 내용의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
- 접경지역 시군 상세 기준 마련, 관계 부처 협의 마치고 12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행정안전부는 가평군·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지정 하기 위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월 13일(금)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힘.

그동안 가평군과 속초시는 접경지역 시·군과 지리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이에 대한 현실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행정안전부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접경지역 시·군'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통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가평군과 속초시를 접경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실시했음.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에 따른 특별 지원*이 가능.

* 국가보조사업 신규 반영, 국가보조금 보조율 상향(50~70% → 70~80%) 적용, 보통교부세 추가 교부 등 재정 지원

■ 디지털 기술로 살기좋은 지역사회 실현

(내용요약) [바로가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지역 디지털 혁신을 통한 균형발전 실현(2024 지방시대 시행계획, 4.4.)' 이행의 일환으로,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사업을 통해 주민의 삶을 혁신적으로 개선해 온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제2회 「지능형 마을 성과 보고회(스마트빌리지 페스타)」를 12월 12일 개최한다고 밝힘.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보급·확산 사업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인구감소, 고령화, 생산성 저하 등 지역사회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과기정통부의 대표 지역사업이다. '23년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되어 전국 17개 광역시·도에서 자율적으로 기획·추진하는 사업이 되었으며, '농어촌 소득증대', '생활편의 개선', '안전강화', '주민시설 지능화' 등 다양한 주제로 혁신 사례를 창출하고 있음.

올해 지능형 마을(스마트빌리지) 우수사례로 선정된 지자체는 총 4곳으로, ①농촌 모빌리티 전복사고 즉시 알림 서비스로 황금시간을 확보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한 경북 예천군, ②1인가구(고령층)에 도플러 신호와 사물인터넷 기반의 원격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독사 예방과 지역사회 융화에 기여한 부산광역시, ③초고령화 사회에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건강 관리를 위해 다양한 여가·복지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지능형경로당을 구축한 강원 원주시와 경북 성주군이 선정됨.

5. 뉴스브리핑

출처

■ 경로당 냉·난방비 집행잔액, 부식비로 사용 가능

(내용 요약) [바로가기](#)

보건복지부

- 노인 민생토론회(3.21.) 후속,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공포·시행
-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경로당의 냉·난방비 집행잔액을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힘.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부터 주 5일 식사 제공이 가능한 경로당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함.

경로당 운영 지원은 2005년에 지방 이양된 사업이지만, 경로당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영양공급을 위해 2019년부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2024년 800억 원)를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경로당 식사 제공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지방자치단체 수요조사 등을 통해 올해 양곡비(63억 원) 및 노인일자리 연계 급식 지원인력 9천 명(88억 원)을 추가 지원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밑반찬 구입 등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다. 상반기 점검 결과, 6만 개 경로당에서 주 3.5일 식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 5일 식사를 제공하는 경로당은 2.4만 개로 지난 4월(2.3만 개)보다 확대되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늘 공포·시행되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의 지난해 지방자치단체 예산 집행률(87.6%) 고려 시 올해 예산의 약 107억 원을 부식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 데이터 기반 소상공인 경영지원 플랫폼, '소상공인 365' 시범운영 개시

(내용 요약) [바로가기](#)

중소벤처기업부

- 11월 29일 9시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운영 진행 후 내년 1월 정식오픈
- 빅데이터 상권분석, 내 가게 경영진단, 상권·시장 핫트렌드, 정책정보 올가이드 등 예비창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주요 서비스 제공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1월 29일(금) 9시부터 12월 31일(화)까지, 예비창업자 및 소상공인을 위한 데이터 기반 경영지원 플랫폼인 "소상공인 365"의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힘.

소상공인 365는 지난 18년간 운영된 '상권정보시스템(2006년~)'을 더욱 고도화한 플랫폼으로, 정부 국정과제(2022.5월)의 일환으로 개발됨.

소상공인 365는 64개의 공공 및 민간 데이터를 수집, 22종으로 융합해 데이터의 품질과 범위를 확대*하고, ①빅데이터 상권분석, ②내 가게 경영진단, ③상권·시장 핫트렌드, ④정책정보 올가이드 등의 주요 서비스를 제공해 예비창업자와 소상공인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지원함. * (기존) 42개 데이터 융·복합 → 11종 / (개선) 64개 데이터 융·복합 → 22종